

日本에서 原子力PA活動 方法論의 考察



坂本 俊

〈(財)日本 原子力文化振興財團 PA情報調査室長〉

原子力 PA活動의 對象

「퍼스널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국에 반원전의 정보가 흘러가고, 록리듬과 함께 “반원전의 노래”가 불리어진다. 그리고 매스컴의 자극적인 반원전기사. 주부 등과 生協의 자연식품운동 등으로 전개되는 반원전운동은 지금은 풀의 뿌리식인 뻗어남을 보이고 있다. 패손화한 현재의 반원전운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작년 일본의 어느 잡지에 게재된 기사의 한 귀절이다.

최근 국정선거 등이 있어서 반원자력운동도 정치운동에 휩쓸려서 패손성은 없어졌으나, 이 기사는 일본의 반원전운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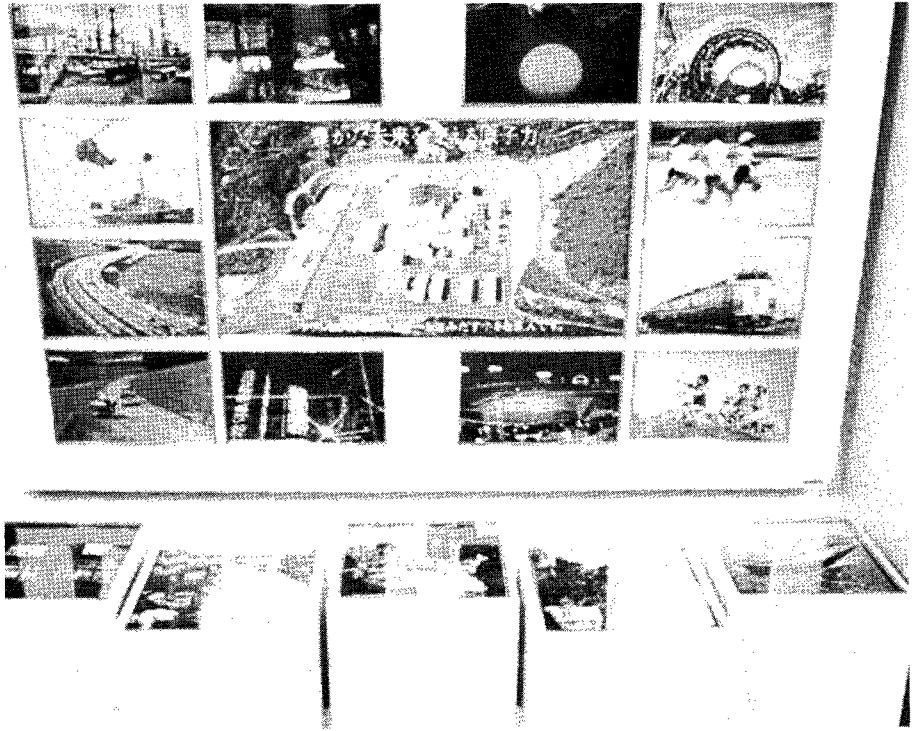
일본의 반원전운동은 종전의 국지형에서 도시형으로, 지역주민형에서 소비자운동형으로 변했고, 그 동기도 이전의 기술적인 안전논쟁에서 감각적인 거부에 의한 것으로 옮겨졌다. 원자력 발전개발의 초기부터 계속되온 Old·Wave의 운동, 즉 원자력시설 입지지역의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특정의 노동조합, 정치단체 등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하였던 반원전운동은 체르노

빌사고 이후 양상을 달리해 도시의 주부를 위시하는 부인층, 청년층, 각종 시민단체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New·Wave의 반대운동으로 변했다.

Old·Wave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력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이들과는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도 원자력에 관한 정보에 접촉했었으며,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New·Wave의 반핵운동은 이러한 정보나 지식을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보기 보다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체르노빌사고 발생 직후의 일본은 유럽제국과 비교해서 비교적 평온했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전력회사와 정부에 의한 설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행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사람들은 불안을 완전히 불식은 못하였다고는 하여도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반원전의 New·Wave가 생긴 것은 체르노빌사고 이후 약 2년 후였다. 그동안 원자



력사고의 공포나, 방사능영향의 무서움을 과장한 간행물이 연이어 출판되었고, 같은 양상의 캠페인이 각지에서 반복되었다. 또한 그 무렵에 유럽에서 수입된 식품의 일부에 방사능이 함유되었음이 검출되어 일반시민, 특히 가정의 주부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어 이론을 무시한 감각적인 반원전무드가 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일부 사람들이 발표하는 공포의 메시지는 각종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퍼져갔다. 그 결과 원자력PA (Public Acceptance) 활동의 대상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다.

PA活動의 具體的인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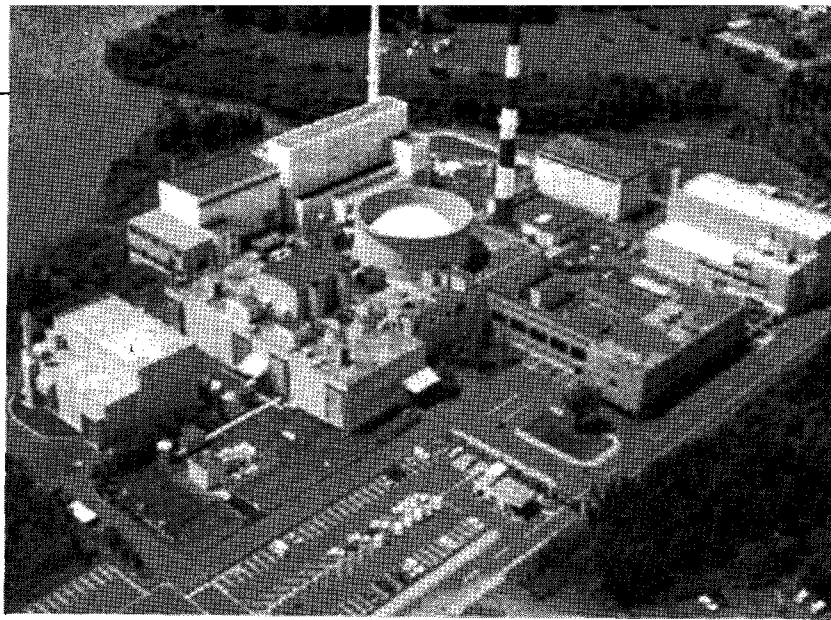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홍보는 중요한 PA 활동의 하나로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원자력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원자력에 대한 평가가 백지상태인 사람들에게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원자력에 대하여 이미 일방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PA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전력회사, 메이커,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에너지·원자력 관계단체 등은 PA 체제를 강화하고, 각각 분담, 혹은 협력하여 PA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특히 New·Wave에 대한 몇개의 구체적인 예를 포함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PA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복수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미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매체나,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는 전국지에 매주 에너지·원자력의 한마디 메모라는 작은 논평광고를 연재하고 있으며, 그 시절에 맞는 화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의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또 “히로세·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발단이 되었던 반원전 작가의 책 「위험한 이야기」의 비과학적인 저술을 반론하는 「위험한 이야기의 잘못」 등도 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자정보이나, 최근에는 각 기관에서 비디오테이프, TV 광고 등 홍보소재의 시청각화가 진전되고 있다. 동시에 반대파와의 대담이나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는 지식인, 문화인 등의 언론지도자나, 매스컴 관계자에게의 정보자료, 활자에 의존하지 않는 청소년용으로의 만화 등이 발행되고 있다.

또 에너지·원자력을 주제로 하는 중고생으로부터의 작문응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 교실에 방사선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 보도관계자를 위한 세미나 등의 개최, 또한 지방도시에서의 강연회나 지역의 여론주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도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활동의 예로서 원자력에 종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미리 등록하여 놓고 반대파를 포함하는 여러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문가를 출강시키는 「강사파견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원자력전화질문」이라는 시스템은 원자력에 관한 일반시민으로 부터의 여하한 질문에도 대답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이얼만 돌리면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또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키스테인손을 설정하여 여러가지 자료·정보를 입력해 두고, 호출부호로 불러내면 한밤중에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험중이다.

이런 것은 정부와 정부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실시중인데, 일반시민이 갖고있는 다양한 관심에 하나하나씩 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현재까지 일방통행이었던 일반시민에의 정보제공을 쌍방교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 최근의 원자력홍보활동의 예를 들어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력회사와 제작회사가 시행해 왔던 다른 한가지의 합의형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력회사와 메이커는 여러가지 PA 활동에

더하여 관련회사를 포함한 사원과 그 가족에의 지식보급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수용가 혹은 소비자인 일반시민과의 접합점에 서게 되는 영업부문의 원자력교육을 강화하여 기본적인 합의형성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나 플랜트제작공장 등의 견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서 그 원리와 함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의 실체를 시민의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脱原電運動에 대한 對應

최근 큰 논점으로서 탈원전이 제창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반원전파가 국제적으로 제창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에서도 “반원전”에서 “탈원전”으로 슬로건이 옮겨가고 있다.

아직까지의 “반원전”운동을 현상면에서 파악해 보면 주로 원자력발전소나 핵연료시설의 건설, 운전에 반대한다는 대증료법(對症療法)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탈원전”운동이 되면 그것은 사회적인 구조나, 생활양식을 바꾸자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현재 일본의 반원전단체가 「탈원전사회」를 제창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세력을 규합하여 탈원전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서 1,000만명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금년 6월의 발표로는 서명자수는 120만명으로 목표에는 훨씬 못미친다. 물론 이 운동은 헌법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청원권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서명자수는 법적으로 뜻이 없으며, 단 한사람이라도 청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범안으로서 국회에 상정시키려면 일정수의 국회의원의 찬동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서명자수는 의원에 대한 압력의 크기가 된다.

탈원전법의 골자는 ① 건설중, 계획중인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주기시설을 즉시 폐지, ② 운전중인 이러한 시설은 일정한 경과조치의 기간내에 모두 폐지, ③ 방사성폐기물은 지하나 해저에 저장하지 말고 국민의 눈이 닿는 곳에 발생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라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 세가지 점만으로는 직접적인 이미지는 분출하지 않으나, 탈원전법을 제정하여 탈원전사회를 구축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탈원전파가 제시하는 원전이 없는 사회로의 에너지시나리오에 의하면 먼저 성(省)에너지, 절전을 한다. 그리고 우선은 복합발전을 하면서 부족분은 수력, LNG, 석탄 등으로 조달하고, 결국은 자동차수송을 철도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소비 전체를 축소시켜나간다고 되어있다.

물론 에너지절약은 원자력의 가부 이전의 문제로서 일본이 특히 추진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반원전파가 말하듯 진행시킨다면 사회적 혼란은 필연적이며, 경제후퇴, 생활수준의 저하는 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 사회로의 변화는 독재국가나, 관리경제사회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탈원전사회라는 개념이 표면화한다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에너지문제, 원자력문제를 생각하는데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오히려 원자력이 없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현실의 사회와 개개의 생활과 결부하여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탈원전사회의 제기는 흔히 안전문제로만 취급된 원자력문제를 에너지자원, 환경, 인구, 식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시 보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로서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이런 제문제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질 높은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데 한층 노력해 나갈 것이다.